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 촉구...

양성봉 교수, TRI 활용 인터넷 공개 필요 ... 미국·일본은 시행

유해물질 확산에 따른 주민 피해를 막으려면 화학공단이 취급하는 모든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누출사고 때 예상되는 피해범위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성봉 울산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4월21일 <울산 관내 유해화학물 실태> 연구자료에서 “화학공단 사고 때 독가스와 유해물질로부터 주민 피해를 줄이려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TRI)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TRI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TRI가 미흡한 이유로 사업장별·물질별 배출량이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 인근 주민의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배출량 정보를 인터넷 등에 알리는 위해정보 전달(Risk Communication)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점 등을 꼽았다.

또 “울산공단은 특정대기 유해물질 35가지 가운데 9가지를 화학공단에서 사용하고 있고,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은 6사에서 연간 1만5210톤을 취급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때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으로 환경부와 울산시가 울산·온산공단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사용량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양성봉 교수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이 대기에 누출됐을 때 사업장별 유해물질의 독성크기, 예상 피해범위 등도 인터넷에 알리는 위해정보전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미국은 주민 거주지 인근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배출량이나 사고 가능성, 대처 요령을 공개한다”며 “일본에서도 유해물질 배출량, 위치, 추이 등을 주민에게 알려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를 해야 돌발적인 재난 발생 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은 불가피한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성봉 교수는 실태조사 자료를 4월22일 울산시 의회가 주관하는 <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22>